특금법 신고기한 코앞… 중소형 거래소 추가 여부 '촉각'

고팍스·지닥·후오비코리아 등
시중銀과 실명계좌 확보 논의중
이번주 중 발급여부 확정 전망
우리·전북銀 "계획없어" 선 그어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암호화폐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가상자산거래소의 신고기한 마감(9월24일)이 임박하면서 '빅4' 외에 중소형 거래소 가운데 추가로 실명계좌 발급을 받을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 거래소가 막판까지 은행과의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주가 실명계좌 확보 거래소가 추가 될 지 여부가 결정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고팍스, 지닥, 후오비코리아 등 일부 가상자산거래소가 은행의 실명확인계좌 확인서 확보를 위해 시중은행과의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 중에서는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은 이미 확보해둔 상태다. 다만 원화거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요건인 은행의 실명계정 확인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특금법에 따르면 오는 24일까지 실명계정 확인서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원화마켓 서비스를 중단하고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막판까지도 은행과 논의를 통해 원화마켓을 포기하지 않을 방침이다.

실명계좌 발급 논의를 이어가는 거래소 중 하나인 고팍스의 경우 이날까지도 협상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고팍스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위한 준비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소통하고 있는 은행과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 업계에서는 원화마켓을 중단할 경우 사전에 공지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이번주 중에는 발급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방은행에서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검토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일부 매체를 통해 아직까지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계좌발급이 없었던 우리은행과 전북은행 등이 발급을 진행할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우리은행에서는 신고 기한까지 추가적으로 제휴를 진행할 계획이 없다며 단호하게 선을 그은 바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실명계좌 발행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후보인 전북은행 역시 공식적으로는 계좌 발급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일부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정 확인서 발급을 위한 검토를 진행한 바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거래소들이 실명계정 확인서 발급을 염두한 듯한 이벤트를 이어가는 점을 들어 발급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고팍스는 입출금 계좌 사전예약 신청 이벤트를 지난 10일부터 이어오고 있다. 지닥 역시 다음달 7일까지 원화입금 고객에게 연 7%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이어가고 있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신용카드 리볼빙 이용 추이〉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6월
이용자수	266만명	284만명	269만명	274만명
이용금액	6조원	6조4000억원	6조2000억원	6조40000억원

/금융감독원

고금리 '카드 리볼빙' 증가
차주·카드사 리스크 우려

리볼빙 이용자·금액 늘어
카드론 평균 금리도 상승
취약 차주 대출절벽 지적

경기침체 장기화로 금융 소비자의 상환능력이 저하되면서 카드 장·단기 대출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사용이 늘고 있다.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차주가 대출절벽에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269만명이던 리볼빙 이용자는 올 6월 말 274만명으로 증가했다. 이용금액 역시 지난해 말 6조2000억원에서 올 6월 말 6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리볼빙이란 소비자가 사용한 카드대금 가운데 미리 약정한 청구율이나 청구액 만큼만 결제하는 제도다.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 대출 형태로 전환돼 자동 연장된다.

이월된 카드 부채에 지속적으로 이자가 부과되는 방식인 데다 고금리가 적용되며 장기 이용시 차주의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7개 전업 카드사의 리볼빙 평균 금리는 5.5~19.9%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도 증가 추세다. 최근에는 대출 규제 강화로 고신용자들이 카드론에 몰리며 대출 문턱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전업카드사 7곳의 카드론 잔액은 총 33조17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2조8740억원) 증가했다.

카드사들의 수익성 개선 노력과 대출 규제까지 더해져 금리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7개 카드사의 표준등급 기준 카드론 평균금리는 13.1%로 전월 대비 0.15%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신한·삼성·우리·현대·하나카드의 경우 고신용자(신용등급 1~2등급) 평균 금리도 전월 대비 올랐다. 하나카드가 11.32%로 가장 높았고 신한·삼성카드가 각각 10.11%, 10.38%로 뒤를 이었다. 현대카드와 우리카드의 경우 각각 9.46%, 8.68%로 나타났다.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카드론은 축소되고 있다. 지난 7월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되고 대출 감독이 강화되면서 전업카드사 7곳 중 삼성·현대카드를 제외한 5개 카드사에서는 7~10등급 차주를 대상으로 카드론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 수요자의 최종 창구로 불리는 현금서비스 이용도 증가세다.

올 2분기 7개 전업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신규 취급액은 12조6032억원으로 1분기 대비 4.7% 증가했다. 현금서비스는 통상 18~19%대 고금리를 적용하며 연체 시 부실 위험이 높다.

하반기 들어 일부 카드사는 현금서비스 최저 금리를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응했다는 설명이지만 취약 차주가 몰릴 가능성이 우려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고금리 카드 대출 상품 및 리볼빙 사용 증가가 차주와 카드사 모두에게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면서도 "완화된 레버리지 규제에 따라 적절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당국의 권고에 따라 카드론도 속도 조절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소완 기자 think@